

2021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 (인문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1] <제시문1>~<제시문5>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제시문1>

관료제란 전문 지식을 배우고 체계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중요한 정치경제 기구를 장악하여 지배하는 통치 체계(governance system)를 말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관료제는 폐쇄적 네트워크에 머물게 되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관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관료제의 폐쇄성은 나만 생존하면 된다는 부서 이기주의로 표출되기 십상이며, 정해진 매뉴얼에만 갇히다 보면 조직 내에 타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면 관료제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토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두려움 없는 비판,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정치체제가 절실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제시문2>

말에는 힘이 담겨있다. 보이지 않는 말의 힘에 사람들은 상처 입고 치유 받으며 살아간다. 말은 개인의 사고에 의해 선택된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종교·성 등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운동이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자제하자는 것이다. 물론 올바름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동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찬성과 반대 측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으며, 사소한 단어마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가며 써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다양한 개인이 모인 단체에서 그 기준을 통일하기는 힘들며 한 기준을 무차별적으로 내세우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어생활에서부터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시문3>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의할 때 용인될 수 없다.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의견 표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의견 표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격하거나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라고 모욕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어느 표현이 과격하고 저열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자존감을 침해할 경우에만 처벌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지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말은 초등학교생 같은 소리이다’라는 표현도 교수가 학생을 향해 사용한다면 모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교수에게 사용한다면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可罰性)이 달라진다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침해가 생길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법원이 한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단하는 것 자체가 행복 추구권의 핵심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

논술시험 (인문계)

<제시문4>

어떤 사람의 판단이 진실로 믿음직하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늘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치고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 인간 지성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옳지 않은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쩍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시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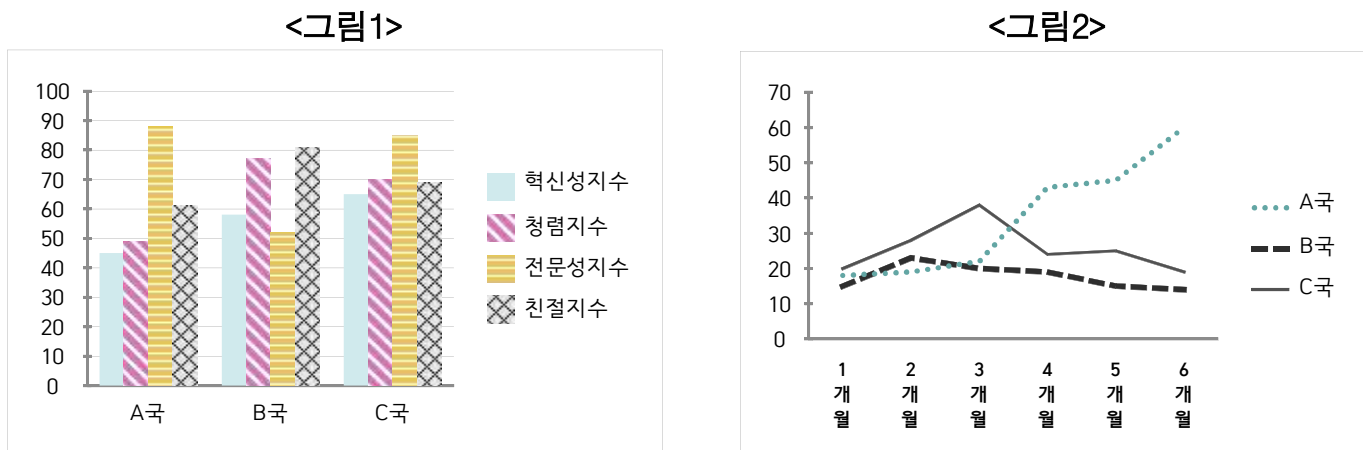
현대 국가는 시민들 사이의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왔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는 상당부분 줄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인간 행위의 많은 부분이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단순히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 예컨대, 친구에게 "내 생일 파티에 올래?"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화자의 언표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실 욕설이나 폭언은 언어를 통해 행해지지만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또 다른 폭력이기도하다. 그래서 욕설이나 폭언은 언어폭력이 되는 것이다. 협박이나 위협 역시 언어행위로 이루어진다. 김승의 싸움과는 달리 오늘날 인간의 싸움은 완력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야만적인 것은 아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2]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 <자료1>에서 <그림1>은 국제언론자유협약 체결 직전 A, B, C 세 국가의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그림2>는 협약 체결 직후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를 B, C 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료1>은 [문제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시오.(세 국가의 공무원 수 및 나머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20점)

<자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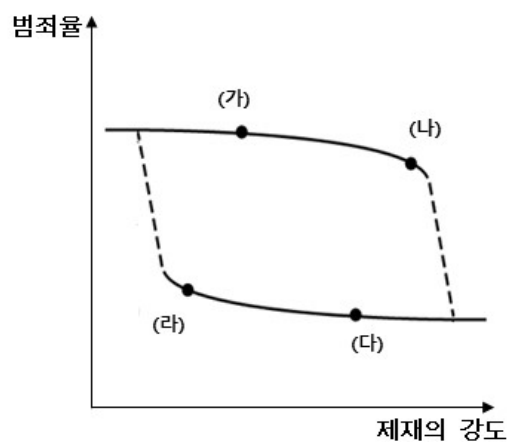


* y축은 비리 적발건수를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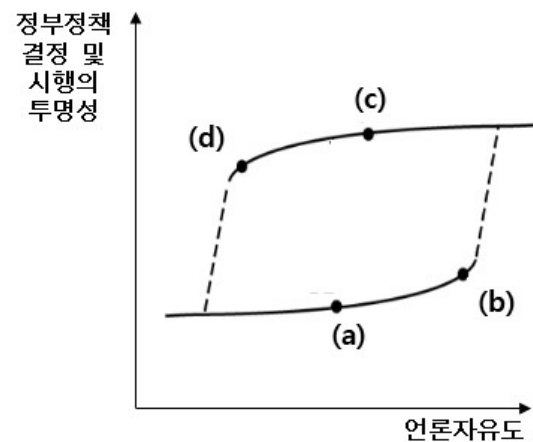
(2) <자료2>에서 <그림3>과 <해설>을 참고하여 <그림4>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20점)

<자료2>

<그림3>



<그림4>



<해설>

<그림3>에서 위쪽 실선은 범죄율이 높은 사회의 범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아래쪽 실선은 범죄율이 낮은 사회의 범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범죄율이 높은 사회의 경우 점 (가)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제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더 커져도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제재의 강도가 (나) 지점을 지날 정도로 강화되면 비로소 그림의 점선처럼 급격히 감소하여 범죄율이 낮은 사회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범죄율이 낮은 사회는 점 (다)처럼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경우 제재 강도가 웬만큼 감소하여도 범죄율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그치다가 (라) 지점을 지나게 되면 그림의 점선처럼 급격하게 상승하여 범죄율이 높은 사회로 전환된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3] [문제1]의 두 입장과 연결지어 <보기>의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30점)

<보기>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